

KMI 동향분석

VOL.170
2020 JUNE

발간년월 2020년 6월(통권 제170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김형근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관리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해양수산 관점에서의 2020년 중국 ‘양회’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19 변화 흐름 감지하고 대응책 수립해야

한광석 중국연구센터장
(kshan97@kmi.re.kr/+86-21-6090-0395)
김세원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sw@kmi.re.kr/+86-21-6090-0395)
희가혜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하영희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끝으로 중국 한해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다. 올해 ‘양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국제 경제정세를 반영하여 목표 성장률을 발표하는 대신 ‘6대 보장, 6대 안정’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해양수산 분야 정책 역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제안이 주를 이루었다.

(해운·항만·물류 분야)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는 기존의 개혁개방 견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혁신을 제안하고 있다. 대외 개방으로는 ‘연해운송(샤오파이)’ 업무 개방과 자유무역항 개발, 그리고 자유무역시범구 확대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샤오파이 업무 개방은 교통운수부에서도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해운업의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 혁신, 크루즈선 운항 재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해양·수산 분야) 해양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해지역의 일체화 발전 추진 및 해양과학 기술 혁신 성과의 상업화를 강조했다. 또한, 해양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양생태환경 보호와 지속 강화에 대한 조화 문제를 중요시해야 할 상황이다. 해양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보호 체계의 구축, 대표적인 해양생태시스템 보호 강화 및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정리 강화 등 건설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해양의식 교육 강화도 중국 해양강국 건설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이에 관한 고위층에서부터의 ‘상층설계’ 강화 및 교육방식 다양화 등 추진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수산업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에 대한 빈곤구제를 강화하고, 농(어)촌 생산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심해양식업과 녹색양식업 육성,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해양목장 건설이 제안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산물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어업자원 회복 및 해양환경 개선, 원양어업 육성 등이 제안되었다.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후퇴 그리고 올해 ‘양회’에서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홍콩 제재방침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도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하이난도 자유무역항 및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및 개방을 강화할 것이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증대로 5G, 물류플랫폼, O2O 산업발전 등으로 해양수산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업태 발전이 전망되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활용한 해양강국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해양환경 등 생태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해양분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고,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해양부문에서의 한-중 해양협력을 확대하여 학술대회,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의 경우 심해양식업 및 녹색양식업에 스마트 기술 활용을 강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속에 개최된 특별한 '양회'¹⁾, 민생안정 최우선 강조

■ 두 달 이상 연기된 '양회', 이례적으로 올해 경제성장을 목표치 미제시

- 올해 '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3월 5일 개최 계획보다 두 달 이상 연기된 5월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28일 전국대표대회 폐막으로 종료됨으로써 기존 계획 기간보다 4일이 단축되었음
-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개막식에서 발표된 국무원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례적으로 2020년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19의 만연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성장률에 대한 언급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부연 설명했는데, 이는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역대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당해의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치 혹은 대략적인 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해 왔으나,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이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올해를 포함하여 단 4차례 뿐임(2000~2002년도 3개년 미제시)
- 또한, 올해 「정부 업무보고」의 글자 수도 10,400자에 불과해 중국 개혁개방 이후 가장 짧은 「정부 업무보고」로 기록됨

■ 「정부 업무보고」,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대해 할애

- '양회'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된 만큼,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의 방역 성과 및 기업지원 조치 등에 대해 전체 분량의 10분의 1 이상을 할애했으며, 「정부 업무보고」 전체에서 '전염병(疫情)'이란 단어가 31회나 등장하는 등 코로나19는 '양회'의 핵심 이슈였음
-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사항과 함께 방역 이후의 조업재개의 추진을 위한 8개 분야 90개의 정책조치를 취하여 경제의 안정을 되찾았음을 설명하였음
- 코로나19의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공급사슬 체인의 단절,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중국의 향후 경제 상황 예측의 어려움을 설명함

■ 2020년 '양회' 교통운수 관련 건의 총 235건, 사상 최고치 기록

- 2020년 '양회'에서 전인대 대표들이 접수한 '의안(议案)' 수는 506건이며, 이중 입법 관련 의안이

1) '양회(两会)'란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 방향, 정부 예산, 경제성장률 및 각 분야의 정책들을 제시·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임

4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또한, 전인대 대표들이 접수한 '건의(建议)'는 총 9,000건을 초과했으며, 전국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위원들이 접수한 '제안(提案)'은 5,709건임²⁾

- 특히 이번 '양회'에서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관 부처인 중국 교통운수부가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로부터 받은 '건의'는 총 235건임. 이는 전년 대비 14.7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의 수치인데, 교통운수부는 이에 대해 '양회' 폐막 전 모두 환류를 진행함³⁾
- 교통운수 관련 건의 중에는 인프라 관련이 70%에 이르며, 그밖에 운송서비스 제고, 스마트교통 발전, 기업들의 조업재개 촉진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룸

■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6대 안정(穩)'과 '6대 보장(保)' 강조

-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이란 목표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경제지표 목표치를 제시함
- 2020년 도시 신규취업자 수는 900만 명 이상, 도시의 등기실업률은 약 5.5%로 설정하여 고용안정을 중시하고 있으나, 2019년 목표치인 1,100만 명 이상, 4.5%와 비교했을 때 대폭 완화된 것으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방증함
- 2020년 재정적자율은 3.6% 이상(2019년 2.8%)으로 설정했고, 재정 적자규모는 작년보다 1조 위안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냄
- 추가로 코로나19 대응 1조 위안의 특별국채 발행을 제시했는데, 특별국채 발행은 1998년, 2007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서 올해 '특별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기업 지원 차원에서 세수 및 각종 부대비용 경감 계획도 발표했으며, 5천억 위안의 세수절감을 포함한 올 한 해 기업들의 각종 비용 2조 5천억 위안을 경감한다는 방침임
-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발표된 항만건설비 면제도 포함되며, 이를 연말까지 연장
- 또한, 올해에는 '6대 보장(六保 : ① 취업, ② 민생, ③ 시장 주체, ④ 식량·에너지안보, ⑤ 산업과 공급사슬, ⑥ 기초 행정조직의 정책이행 보장)'을 통한 '6대 안정(六穩 : ① 취업, ② 금융, ③ 대외무역, ④ 외자, ⑤ 투자, ⑥ 경제예측 안정)'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함

2) '양회'에서는 '의안(议案)'과 '제안(提案)', '건의(建议)' 등의 안건을 발의하는데, '의안'은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이 발의하는 안건(대표단 혹은 30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 발의), '제안'은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발의하는 안건(대표 단독 발의 가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단독으로 건의(의견, 비판)를 발의할 수 있음. '의안'은 우리나라 국회의 '의안'과 성격이 유사하며 '의안'은 통과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제안'이나 '건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련된 부처·기관에서 이에 대해 환류를 진행함('제안'과 '건의'는 성격이 유사). 필자 정리(2020년 '양회' 관련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http://www.npc.gov.cn/npc/c30834/202005/a8a145b69d96434bb78c2334537a669d.shtml>) 및 교통운수부 홈페이지(http://www.mot.gov.cn/guowuyuanxinxi/202005/t20200528_3384958.html) 참조

3) 交通运输部, "代表委员235项意见建议全部办结", 2020.5.29.

표 1. 2020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GDP 증가율(%)	약 6.5	6.9	약 6.5	6.6	6.0~6.5	6.1	미제시
CPI 증가율(%)	약 3.0	1.6	약 3.0	2.1	약 3%	2.9	3.5%
도시 신규 취업자(만 명)	1,100 이상	1,351	1,100 이상	1,361	1,100 이상	1,352	900 이상
도시 등록 실업률(%)	4.5	3.9	4.5	3.8	4.5	3.6	5.5
재정 적자규모(조 위안)	2.38	3.76	2.38	2.38	2.76	2.76	3.76 이상
철도 투자(억 위안)	8,000	8,010	7,320	7,920	8,000	8,029	8,000*
도로·수운 투자(억 위안)	18,000	22,700	18,000	23,000	18,000	23,185	18,000**

주 : 2020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철도(*)와 도로·수운(**) 투자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상기

수치는 2019년 12월에 개최된 '전국교통운수공작회의(全国交通运输工作会议)'에서 제시된 목표치임

자료 : 중국 국무원, 「2017~20120년 정부 업무보고」, 각 연호 및 관련 통계자료

■ 「정부 업무보고」상 해양수산 언급은 미미, '신형 인프라 건설' 최초 삽입

-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어휘 사용은 적은 편이었고, '해양(海洋)' 1회, '항만(港口)' 1회, '수산(水产)'이 언급되었으며, 하이난다오의 '자유무역항(自由贸易港)' 건설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됨
 - '해양'은 올해 임무 중의 지역발전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해양경제 발전'에서 언급
 - '항만'은 기업부담 경감의 '항만건설비 면제'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며, '수산'은 올해 임무 중 농업생산 안정의 일환으로 '수산양식 발전'이 언급됨
- 특히, 올해 추진과제 중 내수확대 및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추진부분에서 최근 중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신형 인프라 건설(新型基础设施)'이란 용어가 최초로 「정부 업무보고」에 언급되었으며, 올해 공공투자 확대의 중점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신형 인프라'는 2018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도로, 철도 등 전통적인 인프라 외에 과학기술의 혁신을 활용하는 인프라로 5G,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인터넷,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초고압(UHV), 전기차 충전소 등 7대 분야가 제시됨⁴⁾

4) 박재곤, "2020년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산업연구원 「중국산업경제브리프」 통권 70호, 2020. 4.

「홍콩국가보안법」제정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 심화

■ 5월 28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국가보안법」 통과

- ‘양회’ 폐막일인 5월 23일 개최된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률 및 집행기제 제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이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됨
-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 동 법은 홍콩 내 중국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적 위임을 받아 홍콩의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법제도 제정과 집행체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문서 3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표 2. 홍콩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1. 홍콩 내 중국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제지, 처벌
2. 외국과 국외세력의 홍콩 분열, 전복, 침투 파괴하는 활동을 예방 제지
3.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 유지 관련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
4. 중앙정부 국가안보 수호 유관기관 필요시 홍콩특별행정구에 설치하여 직무수행
5. 국가안보 위해행위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은 중앙정부에 보고
6.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가 관련 법률 제정하고, 이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문서 3에 추가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 공포
7. 이번 결정은 공포일부터 시행

■ 마·중, 강대강 대결 속에 절충 여지는 남겨두어

-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통과 직후 미국은 즉각적으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단계적인 관세, 투자, 무역 등에서의 우대제도 폐지를 선언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이어 이번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이 더해짐으로써 마·중 갈등은 봉합이 어려워질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국은 「홍콩국가보안법」 세부사항을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단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다소간의 절충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음

■ 홍콩, 무역 허브기능 약화 불가피

- 홍콩은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으로, 이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281억 달러)의 114%(321억 달러)⁵⁾ 재수출되며, 이중 98%가 중국으로 재수출됨

표3. 주요국별 홍콩 경유 재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

구분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① 해당국→홍콩(A)	2,628	422	281	323	272	207
해당국→홍콩→제3국(B)	2,755	530	321	253	179	147
해당국→홍콩→중국(C)	1,109	469	276	218	112	113
재수출 비중(B/A)	104.8	125.7	114.1	78.4	65.6	71.1
중국향 재수출 비중(C/A)	2.2	112.2	98.1	67.8	41.0	54.4

주 : 홍콩달러 기준으로 공시된 수치를 평균 \$HK/USD로 나누어 계산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2020. 5. 28. NO9,

-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가 박탈되는 경우 홍콩으로서는 그동안 활용 가능한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이상 금융, 무역 허브기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홍콩이 금융과 무역 허브로서의 이점이 사라지는 경우 홍콩을 통해 재수출 또는 재수입되는 물량이 감소되고, 이 물량은 결국 소멸되거나 다른 항만에 재배치되어야 하므로 해운·항만·물류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하이난, 선전, 상하이 등이 홍콩의 대체 역할 할 듯

- 홍콩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광둥(廣東)성 선전의 금융기능을 강화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미국의 보복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6월 1일 중국 정부는 하이난자유무역항건설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하고,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이 방안에는 일부 상품에 대한 무관세, 낮은 세율, 간소화된 세금, 재산권 보호시스템, 관세제로, 국경 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자금 흐름 등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39가지 조

5) 재수출 비중이 100%를 초과하는 이유는 수출액 계산시 하역료, 보관비용, 중계수수료 등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마크업(mark-up) 비용이 수입액에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2020.5.28. No.9에서 인용함

치사항이 담겨져 있음

- 이어 6월 2일에는 상하이 해사국, 인민은행 상하이본부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양산항특수종합보세구역 대외개방과 혁신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关于促进洋山特殊综合保税区对外开放与创新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
- 이 의견에는 양산항 내 자유무역지구에서의 국제투자무역서비스 허브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인센티브, 규제완화, 조세, 파생상품 등 대외 금융서비스 등 88개의 조치사항이 담겨져 있음
- 단기적으로 선전, 하이난, 상하이 등이 홍콩의 금융과 자유무역 기능을 완전히 흡수할 수는 없겠지만, 마·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이 홍콩의 금융, 무역 허브기능 대체 역할을 놓고 싱가포르와 대만 등과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임

2020년 해양수산 각 분야의 '스마트화' 기대

■ 2020년 「정부 업무보고」 6개의 중점 추진과제 제시,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 '규제개혁' 및 '신형 인프라' 강화 등 전망

-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2020년 중점 추진과제로 i) 거시정책 강화를 통한 기업 안정 및 고용 보장, ii) 시장주체 활력 제고 및 신성장 동력 확대, iii) 내수확대 및 경제 발전방식 전환, iv) 빈곤 퇴치 및 농업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v)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과 무역·외자기반 안정화, vi) 민생 개선 및 사회사업 개혁 추진 등을 제시함
- 먼저, 기업 안정 및 고용 보장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기업 사회보험료 인하 등 총 5,000억 위안 감세를 포함한 2조 5천억 위안의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취업 지원책 등이 제시됨
- 교통운수 분야의 부가가치세 감면, 항만건설비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전반적인 물류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시장 활력 제고 및 신성장 동력 확대 측면에서는 행정수속 간소화, 중소기업들의 융자 지원, 국유기업 개혁 심화,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흥산업 발전 추진, 특히 온라인쇼핑과 서비스 등 새로운 업태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임
- 해양수산 분야의 행정 수속도 더욱 효율화, 전자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쇼핑의 확대에 따른 택배 분야의 발전,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전망됨
- 셋째, 내수확대 및 경제 발전방식 전환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택배의 농촌 보급 등을 통해 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규모를 3조 7,500억 위안(전년대비 1조 6천억 위안 증가)으로 설정하여 투자 촉진, 특히 5G 응용 등 새로운 기초인프라 건설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생태 환경 보호와 에너지안보 역시 강조함

- 항만, 양식장에서의 5G 활용 등 '신형 인프라' 구축이 촉진되어 각 분야의 스마트화가 기대되며, 교통·수리(水利) 등 중점 건설 강화가 언급됨에 따라, 올해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작년 연말 '전국교통운수공작회의'에서 제시된 목표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삼각주,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등 연해지역 발전 전략과 결부한 해양경제 발전이 촉진되며, 창장 등 수역의 환경생태 보호도 강화될 것임
- 넷째, 빈곤 퇴치 및 농업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측면에서는 빈곤 퇴치를 위한 고용 확대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고표준의 새로운 논밭 53,333km²를 신설 및 돼지고기 생산량 회복 등을 통해 농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임
- 수산양식 발전이 직접 언급되었고, 그 외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조치들이 기대되며 콜드체인물류의 발달 및 빈곤지역 인프라 개발을 통한 수·배송시스템의 개선이 기대됨
- 다섯째, 대외개방 추진과 무역·외자기반 안정화 측면에서는 수출 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수출입 관련 비용 인하 및 수출상품의 내수 전환을 지원하며, 국제 화물운송력 제고,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자유무역시범구의 자주권 확대,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중서부지역 자유무역시범구와 종합보세구 신설, 한·중·일 FTA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자유무역항, 자유무역시범구의 증설과 기존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해양수산 분야 제도 개선 및 개방이 촉진되며, 코로나19로 인해 해운·항공편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체 운송능력 확보 및 중·유럽 정기화물열차(블록트레인) 운송의 활성화가 예상됨
- 여섯째, 민생 개선과 사회사업 개혁 추진 측면에서는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 방역특별국채 활용을 통해 백신·약물 등 개발투자 확대, 의료시설 증강,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및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임
- 현재 공항만 관련 인력(선원 등)에 대한 방역가이드가 변화될 수 있으며, 해양재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개선·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표 4. 「정부 업무보고」의 2020년 주요 추진 과제 중 해양·수산·물류 분야의 영향 분석

주요 임무	관련 영향 분석
거시정책 강화를 통한 기업 안정 및 고용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운수분야의 부가가치세 감면, 항만건설비 면제 조치 연말까지 연장으로 물류원가 절감 • 기타 각종 세수감면 및 기업지원 조치로 인한 해양수산 관련 분야 기업들의 부담 경감
시장주체 활력 제고 및 신성장 동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분야의 행정 수속 효율화 및 전자화(비대면화) 촉진 및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디지털화 강화 • 온라인 쇼핑 등 신형 업체들의 지원역량 강화로 인해 택배 등 물류형태 다변화 및 발달
내수확대 및 경제 발전방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인프라, 특히 '신형 인프라' 구축 촉진(스마트양식, 스마트항만 등) • 각 지역발전 전략에 따른 연해지역의 해양경제 발전 및 주요 수역, 해양 환경생태 보호 강화
빈곤 퇴치 및 농업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양식 발전 촉진 및 어민소득 증대 관련 조치 확대 • 어촌 인프라 개선, 어업 고도화, 도·농 배송시스템 개선 및 농산품 콜드체인물류 촉진 예상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과 무역·외자기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 촉진 및 추가 자유무역시범구 증설 예상,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해양수산 분야 제도 개선과 외자 개방 촉진 • 국제 화물운송력 제고를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해운·항공편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체 운송능력 확보 및 중·유럽 정기화물열차(블록트레인) 운송의 활성화가 예상
민생 개선 및 사회사업 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만의 인력 관련 방역가이드에 대한 연구 심화, 방역지침 변화 가능성 존재 • 각 종 해양재해에 대한 대응시스템 강화 기대

자료 : 중국 국무원, 2020년 「정부 업무보고」, 2020. 5.을 통해 KMI 분석

해운·항만·물류 분야 : 개혁, 개방,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 지속

■ 연해 일부 구간, '연해운송(샤오파이 업무)' 개방 빨라질 듯

- 2019년 8월 상하이 자유무역시점구의 '린강신구역(临港新片区)'이 설립되면서, 외국적 외항선박이 양산항을 국제 환적항으로 하는 경우 컨테이너 화물의 '샤오파이⁶⁾' 업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겠다고 제시함으로써, 국내외의 이슈로 떠오름
- 올해 '양회'에서 상하이항국제여객운송센터 쉬쥔웨이(徐珏慧) 총경리는 외국적 외항 선박이 양산항을 환적항으로 이용 시 컨테이너 화물의 '샤오파이' 업무 개방을 건의 하였으며⁷⁾, 칭다오첸완컨테이너터미널의 쉬첸자오(许振超) 고급경리는 「국제해운조례」 개정을 통한 '샤오파이' 업무 개방을 주장함⁸⁾
-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의 이시용(易继勇) 부국장은 쉘쥔웨이 대표의 양산항 '샤오파이' 업무 개방 건의와 관련하여, 양산항의 '샤오파이' 업무 개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이미 연구가 진행되어 최근 연구보고서의 보완작업에 있다고 피드백함⁹⁾

표 5. 연해운송 개방 관련 제안 내용

소속	제안 내용
쉬쥔웨이(徐珏慧) 총경리 (하이항국제여객운송센터 총경리, 전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적 외항 선박이 상하이 양산항을 환적항으로 이용시 컨테이너화물의 '샤오파이' 업무개방을 건의 - 샤오파이 업무개방은 물류비 절감* - 부산항 환적 수출입 컨테이너를 기수(基数)로 계산 시, 상하이항 '샤오파이' 업무 수요는 100만 TEU로 추산 - 수출세 환급방식 제도 개선 병행 필요
쉬첸자오(许振超) 고급경리 (칭다오첸완컨테이너터미널 고급경리, 전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해운조례 개정을 통하여 외국적 선박들에 대하여 "샤오파이" 환적운송 개방 - 중국 항만들의 국제 환적컨테이너의 비중은 매우 낮음. 국제해운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외무역 컨테이너 환적물량의 '국내구간 운송'이 국제 해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함

* 쉬쥔웨이 대표에 따르면, 아시아~유럽 항로에 11척(2만 TEU급 선박 기준)의 선박이 투입될 시, 이 물류원가를 만약 3,000개의 '샤오파이' 업무에 분배시킨다면, 각 컨테이너의 물류원가를 180달러는 절감시킬 수 있으며, 연해 샤오파이 컨테이너 운송원가를 100달러로 가정할 시, 매 컨테이너 당 물류원가 80달러를 절감할 수 있음

자료 : 저자 정리

- 6) '샤오파이(捎带)'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하는 길에 하다, 혹은 가는 길에 가져오다'라는 의미이며, 연해 '샤오파이(捎带)' 업무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운송 과정 중에서 특정 국가 항만에서 환적을 할 시에 해당국의 국내 항만간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하며, 일종의 카보타지(cabotage) 개방에 해당되지만, **완전한 국내운송 개방이라 보이는 어려운 바 본문에서는 '샤오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중국은 2003년부터 교통운수부의 「국제 정기선사의 중국 연해 주요항만에서 공컨테이너 조정운송 동의에 관한 서한」에 따라, 「공컨테이너」의 리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외국 선사들에게도 '샤오파이'를 허용을 해왔음. 赵姝, 「沿海捎带业务解读」, 「航海技术」(2015. 7.) 등을 토대로 필자 정리
- 7) 港口圈, 「全国人大代表许振超建议: 放开外贸集装箱沿海捎带政策」, 2020. 5. 26.
- 8) 港口圈, 「全国人大代表徐珏慧: 建议以洋山港为中转港开放外籍船沿海捎带」, 2020. 5. 28.
- 9) 中国交通新闻网, 「交通运输部及时落实代表委员意见建议 工作专班做到承接一件办好一件」,

■ 코로나19 팬데믹 속 해운업,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그레이드 유도

- 올해 '양화'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사슬 충격 속에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운업의 디지털 혁신 업그레이드 방안이 논의되었음
- COSCO Shipping그룹 회장인 쉬리룽(许立荣)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사슬에 변화가 왔다면 서 해운업이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¹⁰⁾
- 전화(传化)그룹 회장인 쉬관쥬(徐冠巨) 대표는 스마트물류 플랫폼 역시 '신형 인프라 건설'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으며¹¹⁾, 바이두(百度)의 리옌홍(李彦宏) 정협위원은 스마트 교통인프라시설 건설을 촉진하여 '교통강국'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음¹²⁾
- 소수 정당인 중국민주동맹(中国民主同盟)은 스마트교통 건설을 통해 교통효율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재 육성, 5G, 무인차량, AI 등 핵심기술의 응용 촉진, 스마트 교통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교통 관련 산업의 산업표준 제정·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함¹³⁾

표 6. 해운업의 디지털 업그레이드 관련 논의

소속	제안 내용
쉬리룽(许立荣) (COSCO SHIPPING그룹 회장, 전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따라 글로벌 공급사슬에 변화 · 공급사슬의 지역적인 구도가 더욱 강화되어 미래 지역 분업 특징은 뚜렷함 · 각국은 생산 제조 능력을 더욱 중시하여, 산업사슬은 첨단으로 발전 · 공급사슬에 대한 디지털화가 부단히 심화될 것임
쉬관쥬(徐冠巨) (전화(传化)그룹회장, 전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물류 플랫폼 역시 '신형 인프라 건설'에 포함 · 스마트물류 서비스플랫폼은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I 등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들에게 상호협력, 고효율, 원가절감의 서비스를 제공
리옌홍(李彦宏) (바이두(百度) 대표, 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인프라시설 건설을 촉진하여 '교통강국' 건설 · 각 지역 정부는 투자를 강화하여, 도시 스마트 운영 모델을 모색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스마트 교통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주장함
중국민주동맹 (中国民主同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교통 건설을 통한 교통효율 제고 · 전문화된 인재 육성해야 하며 5G, 무인차량, AI 등 핵심기술의 응용 촉진, 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 수준 제고, 교통 관련 산업의 산업표준 제정·개선이 필요

자료 : 저자 정리

10) 中国水运报, "许立荣: 把握数字化发展趋势 推动航运业数字化转型升级", 2020. 5. 27.

11) 中国新闻网, "人大代表徐冠巨: 智能物流服务平台不应缺席新基建", 2020. 5. 27.

12) 金融界, "百度李彦宏: 加快智能交通基础设施建设 助力交通强国战略", 2020. 5. 20.

13) 中国水运网, "民盟中央: 加快智慧交通建设 提升交通运转效率", 2020. 5. 25.

■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운물류 체계 개선

-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하베이) 협동발전', '웨이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로 이어지는 광역도시권) 건설',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등을 깊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이 된 바 있음
- '양회'에서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운물류체계 개선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었음
 - 창장삼각주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창장삼각주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과¹⁴⁾창장 하구 통항 능력 개선¹⁵⁾이 제안되었고, 웨강아오대만구 지역발전 관련해서는 장시성-광둥성 운하 건설계획¹⁶⁾, 강주아오 대교(총 길이 55km)의 통항량 제고를 통한 물류비 절감¹⁷⁾등이 제안되었음

표 7.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운물류 체계 개선

소속	제안 내용
쉬웨이웨이(徐珏慧) 총경리 (하이항국제여객운송센터 총경리, 전인대)	- 창장삼각주 항만군의 화물 집하운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장삼각주 각 성의 발전계획들을 서로 연계하여 항로조건 개선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창장-해양(河海) 직통 출구를 구축
장루이(张锐) (중국창장항운그룹 회장, 전인대)	- 교통운수부가 지방정부와 연계해 전문업무팀(TF)을 구성하여 창장하구 심수항로 효율화 제고 사업을 추진 · 창장 하구 통항능력과 미래 통항능력 예측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항행규칙을 참고하여 크루즈 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항행규칙을 과학적으로 논증하고 개정·보완
왕아이허(王爱和) (장시성(江西省) 교통운수청 청장, 전인대)	- '장시성-광둥성 운하' 건설 계획을 '14·5'기간 종합교통계획에 포함 · 장시성-광둥성 운하 건설 계획은 장시성 경내 758km, 광둥성 경내 470km에 이르며, 운하가 완공되면, 중국 중부지역과 '징진지', 창장삼각주, '웨이강아오대만구' 지역을 수운으로 연계 가능
쑤원커(苏权科) (강주아오(港珠澳, 대교) 관리국의 수석엔지니어, 정협)	- 강주아오 대교(총 길이 55km)의 통항량을 제고하여 인근 지역 기업들의 도로운송 원가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제안
셰젠(谢坚) (중국우정그룹 주하이시(珠海)분공사 대표, 전인대)	- '웨이강아오대만구' 국제공항센터 건설을 통해 수출입 항공화물 처리 효율을 높이고 물류원가를 낮출 것을 건의
타이완민주자치동맹(台盟)	- 웨강아오대만구'의 물류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 · 복합연계운송하브, 콜드체인, 스마트물류단지 등 중점 물류인프라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자 문턱과 세수를 낮추어야 할 것을 건의

자료 : 저자 정리

14) 新浪财经, "徐珏慧代表：加快发展内河集装箱运输", 2020. 5. 26.

15) 中国水运报, "全国人大代表张锐：提升长江口深水航道通航效率",

16) 中国新闻网, "人大代表建言建设"赣粤运河"联通长江与珠江水系", 2020. 5. 25.

17) 中国水运报, "港珠澳大桥管理局总工程师苏权科：提高港珠澳大桥通车流量 为粤港澳大湾区建设发挥重要作用", 2020. 5. 25.

■ 일대일로와 연계한 자유무역시범구 및 자유무역항 건설 제안

-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중서부지역의 자유무역시범구, 종합보세구 증설 및 하이난도의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이 직접적으로 언급됨
- 전인대 대표이자 다렌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인 샤오성펑(肖盛峰) 대표는 「랴오닝 항만 통합을 계기로 한 다렌 자유무역항 건설 지지에 대한 건의」를 제출함¹⁸⁾
- 정협 위원이자 푸젠성 쉐저우시(泉州市) 정협 주석인 뤼샤오밍(骆沙鸣) 의원은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중점 고려지역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와 환발해지역, 기타 '일대일로'의 중점 연계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건의함¹⁹⁾
- 또한 '일대일로' 건설과 자유무역항 건설을 연계하여, 자유무역항의 복합연계운송, 정기철도 화물열차를 발전시키고, 임항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크루즈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및 한국항로 재개 제안

- 정협 위원이자 중국선박그룹 산하 장난조선소(江南造船) 주임인 후커이(胡可一)는 크루즈산업에 대하여 '정층 계획(顶层规划, 상층부에서의 정책 설계)'을 통해 국가전략 승격을 제안함
 - 크루즈를 '중대 과학기술 장비 중점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크루즈산업에 대한 용자와 세금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새로운 업계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국 자본 크루즈 선사 설립을 통해 중국 크루즈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시함²⁰⁾
- 또한 후커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글로벌 크루즈산업이 중단된 상황에 처해 있는 바, 관광객들에 크루즈관광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크루즈 운영 재개를 위하여 크루즈의 '공해 상 운항' 항로를 개척하고, 조건이 허락한다면 중국 크루즈 선사가 중국-타이완, 중국-한국 항로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상하이항 국제여객운송센터 총경리인 쉬쥔휘 전인대 대표는 중국내 크루즈 운영 재개 및 국제 크루즈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 상시 방역 상태에서의 크루즈산업 발전 회복」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함
 - 코로나19 상시 방역 가이드라인 제정과, 크루즈 항만과 선사의 방역을 강화해야 함
 - 크루즈선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상품 개발 지원 및 기항지(홍콩 포함) 관광증명 자료 절차 간소화 및 전국 범위 공해 운항 확대 추진 필요

18) 港口圈, "人大代表肖盛峰: 支持大连以辽宁港口整合为契机建设自由贸易港", 2020. 5. 25.

19) 新浪网, "全国政协委员骆沙鸣: 加快中国特色自贸港建设 服务"一带一路"倡议", 2020. 5. 25.

20) 中国船舶报, "全国政协委员胡可一: 审视根本性问题, 推动邮轮业高质量发展", 2020. 5. 21.

■ 신형 협력 융합 체제 구축 및 선원육성 강화를 통해 '교통강국' 건설 추진

- 2017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교통강국' 건설을 강국전략 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으며, 2019년 9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교통강국건설 요강(交通强国建设纲要)」을 (이하 「요강」) 발표하며, 중국 교통운수의 청사진으로 작용함
- 올해 '양회'에서 정협 위원이자 초상국그룹 회장인 리젠홍(李建红) 위원은 교통강국 건설 및 '신형 융합 체제 구축'을 통해 자원 활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상 대응체계를 보완하여 업계 관리능력을 제고시킬 것을 건의함²¹⁾
- 전국정협위원 겸 중국항해학회 이사장인 허젠중(何建中) 위원은 선원 육성 정책 의견을 통한 '교통강국' 건설 추진을 제시하였음²²⁾

표 8. 신형 협력 융합 체제 구축 및 선원육성 강화를 통한 '교통강국' 건설

소속	제안 내용
리젠홍(李建红) (초상국그룹 회장, 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강국 건설 및 '신형 융합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부처 연동업무 메커니즘 수립을 통해 「요강」을 이행하며, 중앙 부처·성(部省) 간 긴밀한 협동을 강화하고, 중견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업무 감독 및 심사평가 제도를 제정해야 함 · 복합연계운송 법규제도 및 기준을 보완하여 기업과 상호작용 체제를 혁신하며, 철도·해운·항만 관련 대형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복합운송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추진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적인 물자비축 체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주요 선도기업들이 물류단지 및 창고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구조물자비축 창고, 장치장과 배송센터배치를 최적화시켜 비상사태에서 신속하게 물자 공급을 확보해야 함
허젠중(何建中) (중국항해학회 이사장, 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선원 문제점) 2019년 말까지 원양 선원은 78.3만 명, 연해 선원은 87.7만 명으로 전세계 1위이지만, 노령화 및 낮은 노동의 질 등 구조적인 문제 - (해결방안) 첫째, 선원 관리 법규 제도를 개정·보완하여, '중장기 선원 발전요강(2020~2035)'을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선원의 자질 교육을 해야 함 · 둘째, 감독과 선원 교육의 주체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운업체가 자체적 또는 안정적인 선원 육성을 유도함. 산-학 협력 방식을 통해 선원 육성을 장려하고, 정부 부서, 교육 기관, 해운업체, 선원 관리 회사, 파견 기관 등의 공동 선원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셋째, 선원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실제 선박 연습과 선장 종합능력 평가를 수행하고, 선원의 직업 개발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심리상담과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추진함 · 넷째, 선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함. 직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사회보험 납부제도를 검토해야 함. 선원 전문 기술직 제도 개혁을 심화시켜야 함. 선원 근로계약의 적용과 해사 근로자 요건 검사를 추진하여 선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를 엄중히 조사 처벌해야 함

자료 : 저자 정리

21) 新浪财经, "全国政协委员李建红: 加快构建交通强国新型融合机制", 2020. 5. 25.

22) 中国水运报, "全国政协委员何建中: 加强船员队伍建设 服务交通强国战略", 2020. 5. 22.

해양·수산 분야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발전과 생태 보호의 양립

■ 지역 일체화를 통한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 올해 '양회'에서는 전인대 대표 닙링(宁陵) 중국 광둥해양대학교 부총장은 정부에서 전국 연해 경제벨트를 통합 계획하여 북에서 남쪽으로의 연속성이 있는 통합된 해양경제벨트를 구축할 것을 건의함²³⁾
- 중국민주동맹은 '환보하이' 지역은 교통 인프라 시설 낙후, 지역 자원 환경의 과부 수용 및 지역 산업구조 유사 등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환보하이 지역의 고품질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5개 제안을 건의하였음²⁴⁾

표 9. 지역일체화를 통한 고품질 해양 경제 발전

소속	제안 내용
닝링(宁陵) (하광둥해양대학교 부총장, 전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연해 경제벨트를 통합 계획하여 연속성이 있는 통합된 해양경제벨트를 구축 · 연해 지방정부의 관계자, 해양경제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국가 연해 경제벨트 계획 영도소조(领导小组)'를 구성하여, 각 연해지역이 협력에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전국 연해 경제벨트 계획'을 제정하며 연해 경제벨트의 전략적 포지셔닝, 해안선 구도 배치, 산업혁신 중점, 도시군 건설, 개방구도 및 생태보호 등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 · 북부 연해경제벨트(랴오닝성, 허베이성, 텐진시 및 산둥성의 해역과 육상구역), 동부 해양경제벨트(장쑤성, 상하이시 및 저장성의 해역과 육상구역), 남부 연해 경제벨트(푸젠성, 광둥성, 광시자치구 및 하이난성의 해역과 육상구역)의 3개 연해 경제벨트의 고유한 발전계획을 작성할 것을 제시
중국민주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 차원에서 환보하이지역의 고품질 일체화 발전을 추진 · 첫째, 환보하이 지역 일체화 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지정해야 함. '징진지 협동발전', '송안신구(雄安新区)' 건설,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및 항해수역의 생태환경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촉진 · 둘째, 국무원에 직속한 지역조정발전 영도소조(领导小组)를 설립하여 다차원적인 지역발전 조직구조를 수립하고, 환보하이 지역 일체화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함 · 셋째, '베이징-텐진-송안'을 핵심으로 징진지 세계급 만구(湾区) 도시군을 구축하고 산둥반도 도시군과 랴오닝 중남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며 협동 발전을 추진해야 함 · 넷째, 환경보호 일체화, 교통 일체화 및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 간의 융합발전을 심화시킴. 육해 생태환경 입체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베이징, 텐진, 다롄, 칭다오 등 도시를 중심으로 환보하이 지역의 디지털기술 기지를 구축함 · 다섯째, 기업 등 시장주체가 환보하이 고품질 일체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함

자료 : 저자 정리

23) 南方网, "广海副校长: 打破行政区局限 规划沿海经济带", 2020. 5. 19.

24) 观沧海, "如何发展蓝色经济, 他们这么说", 2020. 5. 29.

■ 해양생태 환경 보호 지속 강화 의견 제안

- 올해 '양회'에서는 해양생태 환경보호 지속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Ningling(宁陵) 대표는 국가 해양생태안전지수를 만들어서 해양생태 안전의 함의를 기반으로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해양경제 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음²⁵⁾
- 농공민주당은 '해양생태환경 보호 전략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소수정당 중 하나인 구삼학사(九三学社)는 해양생태환경 보호제도의 시행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²⁶⁾
- 또한 전인대 대표인 루완메이(陆銑眉) 민남사범대학교(闽南师范大学) 바이오과학기술대학 교수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방제 강화에 관한 대책 건의'를 제출했음²⁷⁾

표 10. 지역일체화를 통한 고품질 해양 경제 발전

소속	제안 내용
닝링(宁陵) (하광둥해양대학교 부총장, 전인대)	- 국가 해양생태안전지수 제정 : 해양생태 안전 지표체계는 연해지역의 경제시스템, 사회시스템과 해양생태시스템 간의 조화로운 발전 관계를 반영해야 하고, 대표적인 생태지표와 경제지표를 포함
농공민주당	- 해양생태환경 보호 전략 체계 구축 · 육해 통합 이념으로 해양계획 체계를 구축 · 해양 녹색 양식 공간을 확대하고, 해양어업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 · 육상 오염원의 바다 배출에 대한 감독 및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돈을 강화 · 지방차원의 해양환경보호법 제정, 다기관 협상시스템 및 육해통합 오염방제 구축 · 해양 첨단기술 산업화 추진, 해양생태환경 과학기술의 연구와 인재육성을 강화
구삼학사(九三学社)	- 홍수림, 산호초, 해조지 등 생태시스템을 위한 법률법규를 조속히 제정하여 해양 생태환경 보호제도의 시행을 추진
루완메이(陆銑眉) (민남사범대학교 바이오과학기술대학 교수, 전인대)	-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방제 강화에 관한 대책 건의'를 제출 · '외국 쓰레기 수입의 전면적 금지' 정책의 시행 · '플라스틱 금지' 전문법의 수립을 추진하고, 비닐봉지의 생산, 판매와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시민과 기업의 녹색 소비를 장려 · 오염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오염 기업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함 · 중점 해역의 해양쓰레기 오염 방제 전문 계획을 편성, 해양쓰레기 오염 방제의 관리방법을 제정하며 각 기관의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책임제도를 착실히 이행하여 해양쓰레기 종합 방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거버넌스에 심층적으로 참여 · NGO 환경보호 조직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자료 : 저자 정리

25) 南方网, "广海副校长: 打破行政区划局限 规划沿海经济带", 2020. 5. 19.

26) 구삼학사(九三学社): 중국 과학기술계의 중·고급 지식인들 위주로 구성된 정치연맹의 특성을 지닌 정당

27) 新京报, "海洋生态环境欠账多, 未来如何保护?", 2020. 5. 28.

■ 해양의식 교육 강화를 통한 국민 해양의식 제고²⁸⁾

- 「국민 해양의식 발전 지수 연구보고(2017)」에 따르면, 중국 전국범위에서의 해양의식 수준은 내륙 지역은 연해지역보다 많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양회'에서 정협위원들은 해양의식 교육에 대한 상층설계(顶层设计) 강화 및 합동 메커니즘 구축 등을 건의하였음
- 허윈아오(贺云翱) 난징대학교 교수는 해양의식 교육의 상층설계를 강화, 내륙지역에 대한 해양의식 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교육강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왕쑤롄(王训练) 중국 지질대학교 전(前)부 총장은 청소년 해양의식 교육 강화를 주장하였음
- 뤼샤밍(骆沙鸣) 위원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해양의식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고 건의함

표 11. 해양의식 교육 강화

소속	제안 내용
허윈아오(贺云翱) (난징대학교 교수, 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의식 교육의 상층설계를 강화하고 해양의식 교육과 문화건설 체계를 구축 - 정부 기관은 계획편성을 강화해야 하고, 전 국민의 해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역의 전체 발전전략이나 계획과 연계시키면서, 각 기관 간의 합동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부·산업·학교·연구기관' 사위일체(四位一体)의 해양의식 교육과 문화건설 발전 구도를 형성해야 함 - 내륙지역에 대한 해양의식 교육 강화 - 내륙지역의 해양의식 교육과 문화건설에 대한 투입을 확대해야 하며, 해양박물관, 해양과학 교육기지 등의 건설을 통해 내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해안에 다가가고 알아가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 온오프라인 통한 해양의식교육 강화 - 코로나19 기간에 전국 박물관들의 '온라인 전시회' 개최 수가 총 50억 명을 초과했으며, 작년의 12억 2,700만 명의 오프라인 참관 인수보다 많이 초과하였음 - 해양의식 교육에 있어도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의식 보급과 문화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필요
왕쑤롄(王训练) (중국 지질대학교 전(前)부 총장, 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해양의식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제정 - 청소년 해양의식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제정해야 하고 해양관련 과목을 각 학습 단계의 필수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해양문화 지식의 체계성 및 해양의식 수립과 강화의 지속성을 실현할 수 있음
뤼샤밍(骆沙鸣) (푸젠 취안저우시(泉州市) 정협 부주석, 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미디어 수단으로 해양의식 교육과 문화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참여성과 재미성이 높은 해양홍보교육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

자료 : 저자 정리

28) 观沧海, "多名政协委员为加强海洋意识教育建言献策", 2020. 5. 22.

■ 해양 카본싱크(Carbon Sink) 산업 발전 촉진 제안²⁹⁾

- 모자오란(莫照兰) 중국해양대학교 교수 겸 전인대 대표는 카본싱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사회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및 생태문명 건설 등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따라서 해양 카본싱크 표준체계의 수립 및 해양 카본싱크 기술과 능력 제고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 중국은 세계 가장 큰 해조 배양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해조 배양 생산량의 선중(鲜重)은 1,500만 톤, 간중(干重)은 234만 톤에 달했으며, 총생산액은 580억 위안임
- 해조는 중국의 바이오의약, 해수동물 양식, 해조식품공업 등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해수로부터 73.36톤 탄소, 8.64톤 질소, 0.96만 톤 감축시켰음. 이를 통해 취업안정, 탈빈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해양생태복원 등에 중요한 기여를 함
- 현재 세계에서 해양 카본싱크의 표준 미비, 거래규칙도 미비로 해양 카본싱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 모자오란 인민대표는 해양 카본싱크의 표준체계와 거래규칙의 수립, 해양 카본싱크 거래시장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음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재 간 협력을 강화하여, 해조 카본싱크 자원 수량의 측정표준, 해조 카본싱크 사업의 가치평가 표준 등을 연구하여 제정해야 함. 이와 동시에 해조 카본싱크 거래시장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임업 카본싱크의 경험을 참고하여 시범지점을 선정하고, 해조 카본싱크 거래를 추진하도록 함
 - 기술과 능력 등 측면에서 대형 해조 카본싱크에 대한 계량과 모니터링을 강화
 - 이와 동시에 해조 카본싱크의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함. 생산기술의 수준을 제고하여 해조 배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서 해조 카본싱크의 거래가치를 증가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모자오란 대표는 해조 카본싱크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정책과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음
 - 해조 카본싱크를 해양생태보상 메커니즘에 포함시키고, 해양목장 건설 및 해양생태 복원과 보호 등 중요사업에서의 해조배양의 응용을 강화하며, 기업과 대중이 해조 카본싱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해조와 관련된 금융제품과 금융정책을 혁신하고, 금융자본이 해조 카본싱크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고 유도함. 해조 카본싱크 산업 유도기금을 수립하고, 해조 카본싱크 산업과 다차원적인 자본시장 간의 연계를 촉진하여 기업의 융자경로를 확대함

29) 莫照兰, 「建议加快推动海藻碳汇产业的发展」, 2020. 5. 25.

■ 해양과학분야, 기초연구 강화 및 기술제도 개선을 통한 질적 혁신 추진 필요³⁰⁾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의 지원능력 제고'를 제시했는데, 현재 중국 해양과학기술 혁신은 '양적 축적' 단계에서 '질적 돌파' 단계로 들어서고 있으나 혁신을 제약하고 있는 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선만홍(沈满洪) Ningbo대학교 총장 겸 전인대 대표는 해양과학의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하고 해양인재 육성 등 관련 정책 실시를 건의하며, 시장수요에 따라 해양과학기술 성과를 상업화 전환 체제로 개선하여 기업을 주체로 하는 해양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전인대 대표인 인펑(印萍)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지질연구소 부수석 엔지니어는 중국의 해양과학기술 혁신능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해양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 전환 능력이 여전히 혁신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산·학·연 협력 과정에서 협력 대상을 찾기 어렵고 과학기술 혁신의 운용 메커니즘이 미비되어 있으며, 연구자와 자금투입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정협 위원인 장싱웨이(蒋兴伟)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院士) 역시 해양과학기술 혁신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해 해양 과학기술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만 기술 분야 제도의 장벽을 없애질 수 있다고 제시했음

■ 한창푸 농업부장, 농어촌 빈곤 구제 지원 강화

- 올해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농(어)민들의 고용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이를 위해 농(어)민 생산 및 생활 조건을 지속 개선하고 현대 농업시설, 음용수 안전 사업 및 거주환경 관리를 지원한다고 언급함³¹⁾
- 올해 '양회'의 부장통로(部长通道)에서 한창푸(韩长赋) 농업농촌부 부장은 빈곤지역의 농수산물을 많이 구매하여 농촌 빈곤구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함
 - 첫째, 산업기술 전문가들의 역할을 통해 빈곤지역의 산업발전 품질을 확보해야 함.
 - 둘째, 빈곤지역의 농수산물의 판매를 추진해야 함. 산업 사슬을 도매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두기업과 빈곤지역을 연결시켜야 함
 - 셋째, 빈곤구제 사업과 농촌 진흥을 연계하여 빈곤구제의 사업이 장기간 발전하도록 함
 - 넷째, 선도적인 기업,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을 발휘하여 농어가들을 산업사슬에 참여하게 함

30) 观沧海, "两会代表委员为海洋科技创新代言", 2020. 5. 27.

31) 农民日报, "部长通道开后, 韩长赋回应粮食安全、生猪生产、产业扶贫问题", 2020. 5. 31.

■ 심해양식 및 녹색양식을 통한 양식업 발전 추진

-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농민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수산양식업 발전을 제시했는데, '양회' 기간 중 정협 위원인 마이강선(麦康森) 위원은 심해양식 발전을 제안하였으며, 전국 인민대표, 푸저우 홍동(宏东)어업주식회사 란핑용(兰平勇) 회장은 녹색양식 발전을 제안함
- 마이강선(麦康森) 위원은 심해양식 발전 추진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심해양식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기술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함³²⁾
- 전국 인민대표 푸저우 홍동(宏东)어업주식회사 란핑용(兰平勇) 회장은 녹색양식 발전 및 수산물 품종 구조 조정을 통하여 양식제품품질 향상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음³³⁾

표 12. 심해양식과 녹색양식에 대한 제안

소속	제안 내용
마이강선(麦康森) (중국해양대학교 교수, 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동성 해양기술혁신을 통한 심해양식 발전 추진에 관한 제안서 제출 - 심해 양식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 - 심해양식은 충분한 풍랑 저항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인원 안전, 물자 공급, 제품의 회수 및 운송은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Deep Blue No.1'의 경우, 황해 냉수괴에서 어류를 양식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연구방식 및 작업 환경이 다르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함
란핑용(兰平勇) (푸저우 홍동(宏东) 어업주식회사 회장, 전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양식 발전 및 수산물 품종 구조 조정을 통하여 양식제품 품질 향상 추진 - 중국 수산양식업은 양식수역 환경 악화, 양식구조 불합리, 모델 및 인프라 낙후, 양식규모 및 제품품질 불균형 등 문제들이 있음 - 환경보호 및 어업수역의 관리를 강화함. 댐, 호수의 증양식 개발을 추진하고 양식기술을 향상 시키며 수역환경 오염을 예방·감소하고 법률을 통해 어업환경을 보호함. 친환경, 건강 양식방식을 개발하고 토지 사용면적, 수자원,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신형 어업을 개발함 - 수산 양식업의 구조를 최적화함. 양식 수역 갯벌을 국토공간으로 포함시켜 통일 계획하고 중요 양식수역 범위를 명확함.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품종 업그레이드 가속 및 우수 종자의 보급을 추진하며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양질 수산물을 개발하고 품종 및 구조 다양화, 고품질의 생산 구조를 구축함 - 국가에서 〈수산 양식업 녹색발전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을 발표하도록 건의하고, 해수양식 생산공간을 최적화하여 법률에 따라 양식수역 갯벌의 통일 계획을 강화하고 양식금지 구역, 제한구역 및 양식 허가 구역을 규정함 -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심해 양식의 대기업을 육성하고 심해 양식 산업시설 및 양식시설에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해수양식의 규모화, 현대화 발전을 추진함

자료 : 저자 정리

32) 齐鲁网, "全国政协委员麦康森: 不断探索技术革新 引领国际海水养殖发展方向", 2020. 5. 22.

33) 兰平勇, "发展绿色养殖 注重水产品结构调整和产品质量的提高", 2020. 5. 27.

■ 해양목장의 정보화 및 자동화를 통한 어업생산의 현대화 추진

- 전인대 대표 즈공당(致公党) 칭다오시위원회 부주임위원(副主任委员) 중국해양대학교 해양생명학 모자오란(莫照兰) 교수는 해양목장의 정보화 및 자동화 건설을 통해 해양어업 생산 및 관리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음³⁴⁾
- 모자오란(莫照兰) 교수는 해양목장 정보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원을 통합하고 톱 라벨 디자인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정부 차원에서 전체 발전 계획 및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 자원 통합, 단계별 실시, 체계화 조정을 추진하며, 중앙에서 최고 목표를 수립하고 지방에서 현지 상황에 따라 실시방안을 제정하는 계획 메커니즘을 구축함
 - 기업 차원에서는 해양 정보화 기업들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보 자동화 기술 및 관리의 효과적인 융합을 가속시키며 계획에 따라 해양 정보 자원을 통일 배치하도록 함
 - 기술 차원에서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구축, 허브화된 자동화 시스템, 상호 연결된 플랫폼 시스템, 공용 웹사이트 및 정부망을 연결한 해양목장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함. e-해양목장 기본 지리 데이터베이스 및 환경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하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자동화 오피스 시스템 및 연결 플랫폼을 통해 정보의 즉시 공유, 확대 및 사용을 추진함
- 모자오란(莫照兰) 교수는 함께 해역 통신체계 강화와 정보 시스템 보안을 제안함
 -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통신 신호 범위 및 전송 품질을 개선하고, 관측 요소를 증가하고 실시간 정확도를 높이며 전 해역의 실시간 정보 통신을 실현하여 완벽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
 - 통합 육상, 해상, 잠수함, 항공 및 위성 통신 방법을 통하여 국가의 해역을 다루는 독립적인 통신기능을 형성하고 대용량, 안전, 안정적인 정보 교환 및 정보 전송 서비스 제공
 - 수중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강화하여 수중 표적 탐지, 복잡한 해양 환경 원격 감지 탐지, 수중 통신 및 국경 간 정보 전송, 광역 수중 이미징 및 기타 탐지 전송의 연구 개발을 통해 실시간 정보 수집 및 전송 기능을 향상시킴
- 모자오란(莫照兰) 교수는 마지막으로 중국 각 해역의 환경, 자원, 기후, 리스크 및 경제 발전 현황에 따라 현지의 스마트 해양목장 건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현지 해양 정보화 산업발전을 추진하면서 특색이 있는 발전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34) 莫照兰, “建议加快推进海洋牧场信息化与自动化建设”.2020.5.25

■ 휴어제도 강화와 불법조업 단속 등을 통한 어자원 보호 추진

- 올해 '양회'에서도 어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제도 강화와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전인대 대표인 푸저우(福州) 홍동(宏东)어업주식회사의 란핑용(兰平勇) 회장은 어업자원 개발이용 부담을 줄이고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어업법(渔业法)」 수정 촉진에 대한 '의안'을 발의함³⁵⁾
- 저장성 다이산(岱山) 허위런(柯鱼人) 어업전문합작사 이사장인 샤용상(夏永祥) 전인대 대표는 동해 어장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중국 전국인민대표, 동산현아오자오촌(东山县澳角村) 린화중(林华忠) 서기는 모래 불법 채취 단속 강화 및 여름 휴어제도 보완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음
- 또한, 란핑용(兰平勇) 및 샤용상(夏永祥) 대표는 공동으로 근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양어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표 13. 어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제도 강화 및 불법조업 단속 제안

소속	제안 내용
란핑용(兰平勇) (푸저우(福州) 홍동(宏东)어업주식회사, 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법(渔业法)」 수정 촉진에 대한 '의안' 제출 · 현재 내륙 및 근해 갯벌의 양식 기능을 가진 수역 면적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업 수역에 대한 보호 강화 · 어획 할당량 제도를 전면적 시행을 통하여 어획 감축·관리 수준을 향상 · 어업자원 보호제도를 보완함
샤용상(夏永祥) (다이산 허위런 어업전문합작사 이사장, 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 어장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을 엄격하게 단속 건의 · 해경, 어정(渔政), 해사 등 부문들이 해상 법률 연합 집행 및 구역 간 해상 공동조치를 추진하여 해상 불법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해양어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보장을 제공
린화중(林华忠) 동산현아오자오촌(东山县 澳角村) 서기, 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 불법 채취 단속 강화 및 여름 휴어제도 보완에 관한 제안을 제출 · 연해 모래 불법 채취가 심각하여 해당 구역의 어류가 서식 못하고 해양생태가 파괴되며 어민의 생산 및 생활이 보장되지 못함. 따라서 국무원에서 전문 법률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생태를 보호한다고 제안 · 동해 및 남해 인접 해역에 '3무어선'(선명, 선적, 선박증명서 없는 어선) 몇 백 척이 있고 휴어기 동안에 불법 조업을 종사하여 해양 자원을 파괴하고 있고, 어선 유류비 보조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생산 및 생활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에서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란핑용(兰平勇) 샤용상(夏永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원양어업을 육성 · 원양어업을 통해 근해어획 강도 및 근해수역의 생태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의 해상운송, 수산물 가공, 저장 등 산업 발전을 추진 · 원양어업의 연관산업 클러스터를 촉진시키고, 산업사슬 전반의 경제수익을 높이며, 해양경제의 종합적인 발전을 추진하면서 동해 어장의 자원 회복 및 진흥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 국제어업 자원개발, 선원육성, 외국인 선원 관리, 원양어업 감독·관리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해야 함

자료 : 저자 정리

35) 水产养殖网, “加快修订《渔业法》促进现代渔业可持续发展”, 2020. 5. 25.

■ 수산물 유통 식품안전 강화, 어업생산 QR코드 정보 추적관리 실시³⁶⁾

- 중국공상은행 산시통추안분사 매니저 귀샤오옌(郭晓燕) 전인대 대표는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농 비료를 보급 및 농업, 축산업, 어업생산의 QR코드 정보 추적관리를 실시를 건의함
- 또한, 토지 오염 예방·회복 R&D 및 회복관리를 위해 전문 자금을 지원하고 식품 검사 전문 시설 및 자금을 제공해야 함
- 시장관리를 엄격하게 추진하고 식품안전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식품경영자들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함

■ 수산물 유통업을 위해 농산물 면세 범위에 포함³⁷⁾

- 또한, 부부가오(步步高)회사 회장인 왕톈(王填) 전인대 대표는 농산물 유통절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신선·활 수산물 및 과일까지 확대시키자고 건의함
- 재식농업 및 양식업을 발전하기 위해 중국정부에서 농산물 유통 부가가치세에 관한 혜택 정책을 발표했고, 채소 및 일부 신선 육류·알 제품의 유통 절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는데 신선·활 수산물 및 과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농산물시장과 연결되고 신선제품 생산-판매 안정한 수급관계가 구축되는 생산기지, 합작사(노동조합), 체인 슈퍼마켓 기업 및 공동구매(joint buying)기구에 대해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함
- 정부가 대형 집산 농산물 기지에서 관련 포장, 물자의 생산을 계획하여 산업화 수준을 높이고 운송 소모를 줄여야 하며, 농산물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수매의 품질 등급 검사 제도를 보완하여 농민들이 농산물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신선제품 공급사슬 업스트림의 조직화, 규모화, 상품화, 표준화를 위해 농장에서 수확된 제품의 냉장, 분류·선별, 표준화 가공 및 물류 시설의 건설을 추진해야 함

36) 御城雪, "人大代表为水产渔业发声: 建议扩大农产品的免税范围", 2020. 5. 25.

37) 步步高, "建议扩大农产品的免税范围", 2020. 5. 22.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19 중국 해양수산 분야 정책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책 수립해야

■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기업지원 정책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활용 필요

- 올해 '양회'의 이슈는 민생 안정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과 기업 지원 등을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융자 확대 등의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물류업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민항(民航)발전기금, 항만건설비 감면의 연말까지 연장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 조치들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되고 있는 기업지원 조치 외에도, 향후 추가적인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 등에서 상시 모니터링 및 홍보를 통해 재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빈곤지역에 개발 등 주요 민생사업에 대한 한-중 협력 필요

- '양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현재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과 창출을 매우 중시함
- '샤오캉'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6대 보장'과 '6대 안정'을 강조하였으며, 5.28일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에서는 6억 명이 한 달 소득이 1천 위안이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빈곤 구제가 재차 강조되었음. '양회'의 부장통로(部长通道)에서 한창푸(韩长赋) 농업농촌부 부장 역시 빈곤구제를 강조하였음.
- 따라서 향후 빈곤구제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주민 생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촌에서의 소득창출에 대한 고민과 함께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도농 간의 교통인프라 개선, 농수산물식품 콜드체인물류의 발전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주요 농수산물 거점 지역에 콜드체인 관련 물류인프라 투자도 모색해 볼 수 있음

■ 「홍콩국가보안법」제정으로 인한 마·중 갈등 심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영향 분석이 요구됨

- 코로나19의 책임문제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decoupling), 재중 미국공장의 이전(reshoring)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체인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바, '양회'에서 「홍콩국가보안법」 제정과 미국의 홍콩제제로 인해 최악의 경우 양 정치체제 간 충돌 발생도 우려됨
- 「홍콩국가보안법」 통과로 인해 미국의 대 홍콩 제재가 발동될 경우, 홍콩을 중계 무역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홍콩은 우리나라 4위의 수출 대상국이며,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 중 11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며, 이중 98%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임³⁸⁾
- 특히, 홍콩은 남중국으로 통하는 물류허브로서 다수의 우리나라 물류기업과 선사들이 홍콩에 진출해 있어서 대 홍콩 제재 시 홍콩을 활용한 물류사슬의 단절이 우려되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이에 대해 대체 물류채널 확보, 물류비 상승에 대한 해결책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홍콩 경유가 아닌 중국 직수출 및 기타 우회경로를 통할 시 물류비용 상승도 예상되며, 화장품과 농수산물과 같은 일부 제품은 중국의 통관, 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움³⁹⁾

■ '샤오파이' 업무 개방 가시화에 따른 우리나라 항만 대응 필요

- '양회'에서 상하이항과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한 전인대 대표들의 '샤오파이' 업무의 외국적 선사에 대한 개방 건의가 이어졌으며, 중국 교통운수부에서도 이미 '샤오파이' 업무 개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항만(상하이 양산항 등)에서는 가시화될 공산이 큼
- '샤오파이' 업무를 외국적 선사에도 개방할 시, 우리나라 항만, 특히 북중국의 환적화물 비율이 높은 부산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동 건의안을 발의했던 쉬제웨이 전인대 대표는 상하이 양산항 '샤오파이' 업무 개방 수요는 100만 TEU에 달한다고 주장함
- 비단, 항만뿐만 아니라 한-중 간 운송을 하는 근해선사와 카페리 선사, 중국 다수 항만에 기항하는 인트라 아시아 운송 선사와 원양선사, 그리고 물류기업들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침에 따라, 각 유형 선사, 물류기업 별로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함

38) 재수출 비중이 100%를 초과하는 이유는 수출액 계산 시 하역료, 보관비용, 중개 수수료 등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이 수입액에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임. 한국무역협회,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TRADE BRIEF」 No.9, 2020. 5. 28.

39) 한국무역협회,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TRADE BRIEF」 No.9, 2020. 5. 28.

■ 5G, 신에너지 등 '신형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한·중 간 협력 강화 필요

- 코로나19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프라 관련된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업무보고」에도 언급되었듯이 '신형 인프라'가 중국 인프라 투자의 핵심인 바, 5G, 빅데이터, AI, 무인자동차 등 투자 및 발전 상황, 정책 지원 등을 모니터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비활성화된 부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중국의 항만의 자동화, 스마트 양식장, 각종 해양수산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등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신형 인프라' 구축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되며, 관련된 기술교류, 공동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이미 중국의 IT 기술과 융합한 물류신기술 개발, 해운물류 관련 플랫폼, 항만에서의 5G 활용, 전자동화 터미널 운영 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됨

■ 디지털화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행정처리 발달 및 새로운 업태의 발전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모색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처리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행정수속 효율화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대면 방식에 익숙하거나 관련 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교육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온라인을 통한 비즈니스 형태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해양수산 관련 기업들이 물류플랫폼 사업, SNS 등을 통한 수산물 판매 등 중국의 새로운 업태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여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요망됨
- 휴대폰을 통한 쇼핑과 정보 공유가 확대되는 바,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위챗(중국 SNS) 공공계정, 미니 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케팅 교육 강화가 필요함
-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이 더욱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배송시장의 확대는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함
- 특히 신선배송시장의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위생 관념 제고로 콜드체인물류는 더욱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요구됨
- 콜드체인물류에는 특수창고와 차량 등 다른 물류분야보다 더 높은 초기 투자와 운영 노하우가 요구되는 바, 중국 현지기업과의 합자, 지분 투자를 통한 협력진출은 초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

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됨

- 도심 배송은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진입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나, 3~4선 중소형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진출하거나, 나름 경쟁력을 갖춘 현지 중소형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판단됨

■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및 자유무역항 건설에 따른 중국 진출기업의 관심 필요

-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중서부지역의 자유무역시범구와 종합보세구 증설과 하이난다오의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이 언급되었고, '양화' 기간 여러 지역의 자유무역시범구 신설 건의가 제시됨
- 또한, 「정부 업무보고」 자유무역시범구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대폭 축소를 언급함에 따라, 기존 자유무역시범구의 제도 개혁이 촉진되고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자유무역시범구(자유무역항 포함)의 제도 개혁은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바, 중국 진출 및 중국 내 타 지역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반면, 앞에서 언급된 '샤오파이' 개방 정책과 같이 특수한 정책들도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선행될 것임에 따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련 기관과 연구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새로운 정책들이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야 함
- 「정부 업무보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하이난다오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자유무역항' 건설을 제기함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한 분석과 자유무역항의 개방수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공항만 배후단지 등 유사지역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점을 탐구해야 함

■ 중국 국제 운송능력 확대 정책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대한 활용해야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해운·항공편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제 화물운송력 제고가 언급된 만큼, 중국 정부의 자국 선대, 화물기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 유지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우리나라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중·유럽 정기화물열차(블록트레인) 운송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재 축소된 해운, 항공 노선의 대체 루트로서 중·유럽 정기 화물 열차를 통한 대 유럽, 중앙아시아 운송루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 현지에서 대외 운송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인천공항만을 통한 제3국 운송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운송루트를 '일시적인 루트'가 아닌, 장기적인 루트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

■ 해양 분야에 대한 한·중 협력 강화 필요

- 중국은 '해양강국'으로서의 일체화된 고품질 해양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 육성 등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해양과학기술 육성 등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공동 연구 및 사례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양회'에서는 특히 해양환경 분야에서 해양생태안전지수, 해양생태환경 보호 전략 체계 구축 등 해양생태환경 보호제도의 시행 추진, 해양 카본싱크(Carbon Sink) 산업 발전,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방제 강화에 관한 대책 건의 등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의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함
 - '양회'에서 제시된 해양환경 문제는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한·중 간 학술회의 교류, 과학기술계의 공동 연구 등 한·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양태에 관심 기울여야

-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심해양식 개발, 해양목장의 자동화, 녹색수산업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이후 증가된 비대면 접촉방식의 유통과 함께 식품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업생산 QR 코드를 통한 정보 추적관리 등을 실시가 제안되었음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수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산업생태계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발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에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필요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구분	제목	발간일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제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구분	제목	발간일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제67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구분	제목	발간일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हित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미-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서핑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피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종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	2019.08.19.

구분	제목	발간일
	책 필요-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 해야	2019.08.29.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초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대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제155호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9.11.12.
제156호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과 여객 편의성 제고 필요	2019.11.13.
제157호	해양교육·문화 진흥법 만든다.	2019.11.14.
제158호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 SCM 협력을 강화해야	2019.11.25.
제159호	디지털 연계 공동추진이 실효성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의 첫걸음	2019.11.27.
제160호	수산물포장,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능 고도화를 추구해나가야	2019.11.27.
제161호	연관산업에서 수산업 미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찾아야	2019.11.28.
제162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방향	2019.12.09.
제163호	해양수산 창업 실태 및 시사점	2019.12.27.
제164호	2019 한-아세안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과 협력과제	2019.12.30.
제165호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대응방안	2020.02.18.
제166호	이상고온으로 해조류 공급 차질 우려 수급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2020.03.03.
제167호	양식산 활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수산물 구매 확대에 대비해야	2020.03.31.
제168호	해양공간계획시행법 시행 1년,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 마련해야	2020.04.29.
제169호	코로나 19 이후 양식수산물 수급안정화, '입식 관리'가 우선되어야	2020.05.22.
제170호	해양수산 관점에서의 2020년 중국 '양회'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19 변화 흐름 감지하고 대응책 수립해야	2020.06.15.

URL: <https://www.kmi.re.kr/>